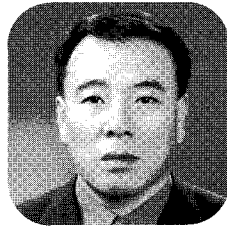




풍년 뒤의 걱정



한농연 충청북도연합회 회장
송인범

산 등성이엔 어느새 청록이 빛바라기 시작하고 들판엔 오곡이 무르익어가 이제 완전한 만추다. 신명나게 풍년가를 부르고 농악을 울리며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의 가슴에는 추곡수매가 인하, 그리고 내년부터 추곡수매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사뭇 불안한 마음으로 가을걷이에 임하고 있다. 현재 협상중인 쌀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화니 관세화유예니 하며 쌀 수출국의 압력에 정부의 협상대응이 추가개방을 받아들이는 맥락으로 가닥을 잡기에 분노를 금할 길 없어 몇자 적어본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7000만 겨례의 문화이자 혼이 담겨있는 생명 그 자체다. 이 소중한 쌀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쌀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들 가까이서 국민의 생명유지에 직결된 기본식량인 것이다. 쌀은 농민의 소득원 이전에 국민전체의 공익적 자산인 것이다. 벼농사는 국토의 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자원 보전 및 정화 등 생태계 보전의 기본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 경관과 전통문화 계승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 한다면 연간 120조 원이라는 어마한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쌀 산업은

자연환경은 물론 국민 경제생활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자산이다.

한 끼 식사에 드는 쌀은 껌 값도 안 되는 200원이고 세끼 식사는 600원이면 충분하며 한 가족의 하루 쌀값이 커피 한잔 값이면 해결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돗물로 점심을 때우는 우리나라 결식인구가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 인구 중 하루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8억 명을 넘고 한 시간에 4천여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 곡물 생산이 1%만 줄어도 곡물가격이 47% 이상 폭등할 정도로 민감하다. 다산장려로 1980년 통일벼를 재배할 때 냉해피해로 흉년이 들어 쌀을 수입할 때 평소 가격의 3배 이상의 가격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식량은 생명에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쌀을 왜곡된 일반경제 논리로 타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양 외쳐대는 반농민적인 경제단체 그리고 개방농정을 펼치는 정부와 지자체, 의회는 이제라도 각성하고 농업, 농촌 회생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올 추곡수매가 인하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 폐지

발표에 벌써부터 도정공장 자체 매입가가 조곡 40kg 1포대에 4만원대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곡수매가 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WTO 규정을 따라야 하니 국제 협약이니 하며 곡물 수출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외교통상정책에 이제 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곡물수입량 세계 2위이며 국민 1인당 미국농산물 최다 소비국이다. 식량자급률이 2003년 말 현재 26.9% 에 불과하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식량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인 식량주권을 가지고 자국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의 압력에 굴복하여 쌀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 예로 우리 밀을 보라. 값싼 수입밀가루를 먹겠다고 수매제도 폐지 이후 우리 밀은 사라지고 100%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선 값이 싸다하여 수입쌀이 추가 개방된다면 벼농사는 밀농사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같이 상황에 따라 대량 계획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벼농사가 망하면 작목 전환으로 인한 과일 생산으로 모든 농업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망할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농가가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 농민에게 농업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농업은 후계인력 전무로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쌀 전업농 6헥타 7만호 전업농을 육성한다 하니 기가 막힌다. 수입개방으로 1가마당 4만원짜리 500가마를 생산하여 농지 임대료 농기계구입자금 등 이자는커녕 다시 7만명을 빚쟁이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다.

전자에 말했지만 우리는 최대농산물 수입국이며 곡물수입국이 세계 2위이다. 더 이상 개방은 있을 수

가 없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도 자국농민을 보호하는데 왜곡된 경제논리로 수입개방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다. 체결 5개월 만에 한.칠레간 무역적자가 370% 나 된다. 한.칠레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3개 품목에 폐원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폐원예산이 신청농가의 10% 밖에 안 되며 실제 칠레산 농산물로 피해를 입는 것은 11월에서 3월까지의 무관세, 4월부터 10월까지의 계절관세 적용으로 동절기에 생산 또는 판매되는 유통기간이 긴 사과, 배, 감 그리고 시설채소, 과일 등이 무관세 수입 물동량 증가와 폐원농가의 품목 전환, 과일생산으로 간접품목이 더 큰 피해를 입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우리 농민단체는 그 동안 정부에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회생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이반자는 들은 제도 없으며 언론 및 농학자들 까지도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농촌에 아끼 울음이 그치지 오래전이다. 이웃 군 어느 면에서는 2003년 출생신고가 1건도 없었던단다. 이런 곳이 전국에 8군데다 된단다. 농촌 복지정책 일환으로 출산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임여성 이 전무한데...

이것이 농업농촌 정책의 단면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자차체, 의회는 확실한 농업농촌 회생정책을 시행하라.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자급율을 26.9%에서 35% 이상으로 올리고 우리농산물을 자라나는 자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전 작목에 직불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에게도 동조를 구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척도는 NGO의 활동과 비례된다. 우리 농업의 사활도 농업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민의 농권운동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 **민농연**